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CONTENTS

- 과학기술 예산 10% ↑, 국방 예산 7.2% ↑, 中 재정 배분 어디에 쓰이나?
- 국무원, ‘소비 진작 특별 행동방안’ 시행...경제 활성화 총력
- 특허 전쟁, 중국의 독주 계속! 2024년 PCT 출원 1위 유지
- AI 기술 발전과 규제 병행, 생성형 콘텐츠 식별 의무화 추진
-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속 中 정부, 기업 보호 위한 법안 시행



본 보고서는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가 중국 과학기술계의 주요 이슈를 발굴하여 정리·작성한 자료입니다. 관련 자료 인용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KOSTEC

Korea-China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01 과학기술 예산 10% ↑, 국방 예산 7.2% ↑, 中 재정 배분 어디에 쓰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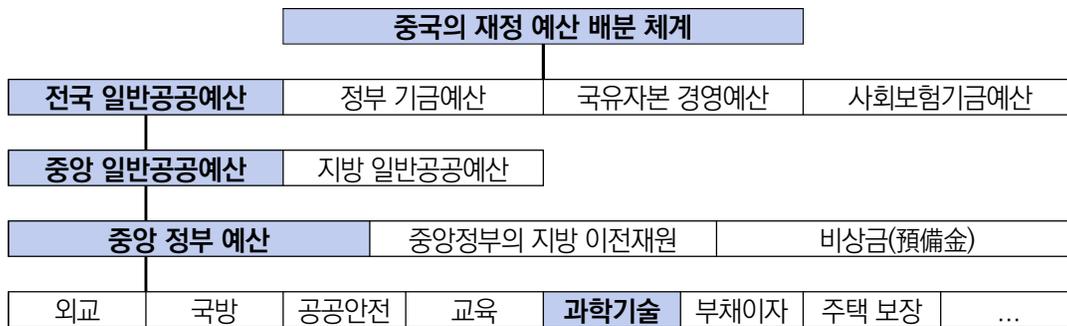
정리(miouly@naver.com)

■ 이번 양회에서 발표한 '2024년 예산 집행 및 2025년 예산안 보고서' 전문이 공개되었으며, 이 중 중앙 과학기술 예산이 3,981억 위안(약 80조 원)으로 10% 증가한 점이 주목받고 있음(25.3.14)

* 본 보고서는 재정부가 작성하고, 전인대 재경위원회가 심사하며, 국무원이 조정·제출, 최종 전인대 승인 후 확정됨

〈참고 1: 중국 국가(중앙+지방) 재정 수입 및 예산 배분 체계〉

- ▶ (수입) 중국의 국가 재정 수입은 **중앙 고정 수입**(관세, 국내 소비세 등), **지방 고정 수입**(부동산세, 도시 유지·건설세, 계약세 등), **중앙·지방 공유 수입**(기업 소득세, 개인 소득세 등)으로 구분
 - ▶ (배분) 중국은 분세제(分稅製) 재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중앙과 지방이 '고정 수입 + 공유 수입(5:5)' 방식으로 재정을 분배
- * 지방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 이전재원(轉移支付)**을 운영하며, 이는 ① 일반이전예산(지방 운영 지원), ② 특정이전예산(국가 주요 사업 및 정책 목표 달성 지원)으로 구성됨



출처: 위 내용은 인민망(2020.8.12.), 중국인민대표망(2019.1.7.), 연합재경연구원(2024.10.23)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및 작성

● ('25년 중앙 정부 예산) 중국 중앙 일반공공예산은 14조 7,460억 위안(약 2경 9,740조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

- 중앙 일반공공예산 중 지방 이전재원은 10조 3,415억 위안(약 2경 874조 원, 70.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앙 정부 예산은 4조 3,545억 위안(약 8,782조 원, 29.5%)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

- 중앙 정부 예산에서 △국방 1조 7,846.65억 위안(360조 626억 원, 7.2% ↑), △과학기술 3,981.19억 위안(80조 3,205억 원, 10% ↑), △공공 안전 2,428.28억 위안(7.3% ↑) 등으로 편성됨

* '25년 전국 과기분야 예산은 12,464억 위안(약 251조 원)이며, 중앙정부 예산은 3,981억 위안으로 약 30% 차지

〈'25년 중앙 정부 예산 배분〉(단위: 억 위안)



- ('24년 중앙정부 과학기술 예산 집행 분야) '24년 중앙정부 과학기술 예산은 3,708.28억 위안(74조 7,96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실제 집행액은 3,619.09억 위안(72조 9,761억 원)으로 기초 연구, 국가 전략 과제 등에 중점 투자됨

- 기초 연구 예산은 979.8억 위안(19조 7,67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13.1% 증가

* 중앙정부 과학기술 예산은 과기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에 배분되어 국가 R&D 및 혁신에 활용됨. 예를 들어, '과기부 '24년 부처 예산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 배정 예산은 121.2억 위안(2조 4,438억 원)으로 전체의 3.27% 차지

〈참고 2: '24년 중국 재정 집행 현황〉

- ▶ (전국 일반공공예산 집행 규모) '24년 전국 일반공공예산 집행액은 28조 4,612.25억 위안(약 5경 7,407조 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재정적자는 4조 600억 위안(약 8,186조 원)으로 집계되었음
- ▶ (중앙 및 지방 예산 집행 비중) 중앙 일반공공예산 집행액은 14조 1,117.34억 위안(약 2경 8,468조 원)이며, 중앙 정부 직접 집행액은 4조 720.18억 위안(약 8,146조 원, 14.3%)으로 6.5% 증가. 지방 일반공공예산 집행액은 24조 3,892.07억 위안(약 4경 9,216조 원, 85.7%)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
- ▶ (중앙 정부 주요 지출 항목) 중앙 정부 예산 집행액은 외교(595.19억 위안), 국방(16,652.08억 위안), 공공안전(2,262.56억 위안), 교육(1,660.71억 위안), 과학기술(3,619.09억 위안, 약 73조 원) 등 주요 분야에 배분되었음

- ('25년 주요 재정 정책 방향) '25년 재정 정책은 내수 확대, 산업 구조 고도화, 과학기술 및 교육 투자 강화, 민생 개선, 지역 균형 발전, 친환경 정책, 국방·외교·안보 강화 등에 주력

〈'25년 중국 주요 재정 정책 개요〉

- ▶ (내수 확대 및 투자 활성화) 소비 촉진, 초장기 특별국채(3,000억 위안, 약 60조 원) 활용, 대규모 인프라 투자
- ▶ (산업 고도화 및 혁신 지원) 제조업 지원 예산 118.78억 위안(2조 3,946억 원, 14.5% 증가): 제조업 신기술 도입, AI·우주항공·신소재 등 미래산업 육성, 기업 R&D 지원 확대
- ▶ (과학기술 및 교육 투자 강화)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예산을 확대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진
 - 교육 예산 1,744.43억 위안(35조 1,823억 원, 5% 증가): 세계 수준의 대학 및 연구 인프라 구축, 우수 인재 양성 지원
 - 과학기술 예산 3,981.19억 위안(10% 증가): **기초연구 및 국가 전략 기술 집중 투자**
 - 핵심 기술 및 국가 연구 프로젝트 지원: R&D 투자 효율성 제고, **청년 과학기술 인재 육성**, 국제·지역 협력 강화
- ▶ (민생 보장 강화) 일자리 지원, 공공의료 강화, 연금 인상, 사회보장 및 재난 대응 체계 구축
- ▶ (지역 균형 및 도시·농촌 발전) 신형 도시화 추진, 농촌 개발 및 식량 생산 안정화, 지방 혁신 인프라 구축
- ▶ (환경 및 지속 가능성 강화) 친환경 투자 확대, 재생에너지·전기차 지원,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 ▶ (국방·외교·안보) 국방 예산 확대, 외교 협력 강화, 국가안보 체계 현대화

참고자료

- ☑ (25.3.13, 人民政府网) 关于2024年中央和地方预算执行情况与2025年中央和地方预算草案的报告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503/content_7013431.htm
- ☑ (25.3.5, 财政部) 关于2024年中央和地方预算执行情况与2025年中央和地方预算草案的报告
https://npcobserver.com/wp-content/uploads/2025/03/2025-MOF-Report_NON-FINAL_ZH.pdf
- ☑ (24.9.1, 科技网) 财政部：今年中央科技支出预算3708亿元
https://www.stdaily.com/web/gdxw/2024-09/01/content_222604.html
- ☑ (19.1.7, 中国人大网) 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
http://www.npc.gov.cn/zgrdw/npc/xinwen/2019-01/07/content_2070252.htm

02 국무원, '소비 진작 특별 행동방안' 시행...경제 활성화 총력

정리(miouly@naver.com)

■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소비 진작 특별 행동 계획'을 발표했으며, 동 계획에는 도시·농촌 주민 소득 증대, 소비 역량 강화, 서비스 소비 품질 제고, 규제 정비 등 8개 분야 30개 중점 과제가 포함됨(25.3.16)

● (배경) 중국 소비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 불확실성과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심리는 위축되는 추세임

* 중국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있으나, 경제 성장, 소비 구조 업그레이드, 신형 소비 형태 확산, 정책 효과 확대 등 다양한 요인이 소매 판매 증가를 견인함

** '24년 중국 정부는 국무원(3월, 확대 소비 특별 행동 계획), 재정부(3월,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 인민은행(2월, 금융 완화 조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소비 촉진 정책을 발표

- '24년 1~11월 중국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6.03조 달러(8,822조 9,960억 원)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나, 같은 해 12월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p 하락함

- 가계의 저축 성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22년 1~9월 주민 예금액이 1.91조 달러 증가하고 도시 가구의 58%가 소비보다 저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소매 판매 규모에서 미국을 상회하나, 1인당 가처분소득은 낮고 저축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

〈미·중 주요 소비 지표 비교 ('22년 기준)〉

지표	중국	미국
소매 판매액	6.38조 달러(9,337조 2,416억 원)	4.92조 달러(7,202조 9,440억 원)
1인당 가처분소득	5,354달러(783만 5,693원)	18,982달러(2,777만 7,582원)
저축률	45%	3.3%

출처: (소후, 24.9.12) 解析中美消费能力差距, https://www.sohu.com/a/808369830_121885661

● (주요 내용) 소비 활성화 및 내수 확대를 목표로 소득 증대, 소비 역량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 대규모 소비 촉진, 소비 환경 개선 등 8개 분야 30개 중점 과제를 제시

〈'소비 진작 특별 행동 방안'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1 도시·농촌 주민 소득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 소득 증가 촉진: 중소기업 및 기초 산업 일자리 지원, 최저임금 조정 재산소득 증대 지원: 금융시장 안정화, 장기투자 활성화, 개인 투자 채널 확대 농촌 주민 소득 증가: 농업 생산 지원,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농촌 경제 활성화 미지급 채무 해결: 중소기업 채무 상환 촉진, 정부 차원의 감시 강화
2 소비 역량 지원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육아 지원 강화: 육아 보조금 제도 도입, 의료보험 적용 확대 교육 지원 확대: 학생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고등교육 강화 등 의료 및 연금 강화: 연금 및 의료 보험 확충, 기본 연금 인상 취약계층 생활 보장: 실업 지원 강화, 저소득층 지원 확대

	분야	주요 내용
3	서비스 소비 품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층·아동 서비스 개선: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유아 보육 시설 개선 생활 서비스 소비 촉진: 외식·가사서비스 산업 발전 지원 문화·체육·관광 소비 활성화: 관광, 스포츠, 공연산업 지원 확대 동계 스포츠 소비 촉진: 스키·빙상 관광 개발, 동계 스포츠 행사 확대 외국인 관광 소비 확대: 비자 정책 완화, 면세점 확대, 쇼핑 편의 개선 서비스업 개방 확대: 의료, 교육, 문화 서비스 개방 및 수입 활성화
4	대형 소비품 교체·업그레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 소비재 교체 지원: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등 친환경 제품 교체 지원 주택 소비 활성화: 주택 개보수 지원, 주거 안정 정책 시행 자동차 소비 연계 산업 활성화: 자동차 개조, 렌탈, 중고차 시장 육성
5	소비 품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 브랜드 강화: 전통 문화 제품 개발, 브랜드 가치 제고 신형 소비 촉진: 디지털 소비 확대, 'AI+ 소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자율주행, 스마트 웨어러블, 로봇 등 신기술 기반 소비 시장을 육성 내수·외수 통합 촉진: 무역 상품 내수 시장 유입 지원
6	소비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휴식 보장: 연차휴가 제도 엄격한 시행,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 소비 환경 개선: 소비자 보호 및 제품 품질 관리 강화 도시·농촌 소비 인프라 개선: 물류 시스템 및 상업 시설 확충
7	소비 제한 조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 제한 조치 완화: 비합리적 소비 규제 철폐 기업 환경 개선: 시장 진입 장벽 철폐, 영업환경 최적화
8	소비 정책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 촉진 정책 연계 강화: 거시경제 정책과 소비 정책의 조화 투자 확대 통한 소비 진작: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 산업 투자 증가 재정 정책을 통한 소비 촉진: 세제 지원, 금융 지원 확대 신용 대출 지원 강화: 소비자 대출 확대, 금융기관 대출 지원 소비 보조 지원 확대: 소비 지원 기금 조성, 지역별 보조 정책 추진

■ 시사점

- 이번 정책 발표는 단기적 경기 부양을 넘어 소비 구조 혁신, 기술 기반 신형 소비 활성화, 내수·외수 연계 강화 등을 통한 장기적 소비 시장 확대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음

참고자료

- ☑ (25.3.16. 人民政府) 国务院办公厅印发《提振消费专项行动方案》
https://www.gov.cn/zhengce/202503/content_7013808.htm
- ☑ (2025.3.17. 发改委) 一图读懂 | 提振消费专项行动计划
https://www.ndrc.gov.cn/xxgk/jd/zctj/202503/t20250317_1396601.html
- ☑ (25.3.16. 人民政府) 如何提振消费? 这份行动方案划出重点
https://www.gov.cn/zhengce/202503/content_7013823.htm
- ☑ (24. CEIC) China Consumer Confidence Growth
<https://www.ceicdata.com/en/indicator/china/consumer-confidence-growth>
- ☑ (22.12. mckinsey) 2023麦肯锡中国消费者报告

03 특허 전쟁, 중국의 독주 계속! 2024년 PCT 출원 1위 유지

정리(miouly@naver.com)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따르면, 2024년 '특허협력조약(PCT)' 출원 건수는 총 273,900건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국이 국가별 출원 건수 및 주요 기업, 교육기관 출원에서 모두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25.3.18)

*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스위스 제네바 소재)가 운영·관리하는 국제 조약으로, 글로벌 특허 출원 절차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 WIPO는 유엔 산하 전문 기구로서, PCT 관리 기관으로 국제 특허 출원 접수, 형식 심사, 국제 공고, 법률 자문 및 회원국 간 협력 조정을 담당

- (국가별 PCT 출원 현황) '23년 소폭 감소했던 중국의 PCT 출원 건수는 '24년 70,160건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약 1% 상승
 - 미국은 54,087건을 기록하며 2위를 유지하였으나,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일본(48,397건), 한국(23,851건), 독일(16,721건) 등이 주요 출원국으로 나타남

〈2024년 PCT 출원 상위 10대 출원국〉

순위	국가	PCT 출원 건수('23년)	PCT 출원 건수('24년)
1	중국	69,527건	70,160건
2	미국	55,618건	54,087건
3	일본	48,992건	48,397건
4	한국	22,277건	23,851건
5	독일	16,944건	16,721건
6	프랑스	7,911건	8,125건
7	영국	5,567건	5,861건
8	스위스	5,398건	5,324건
9	인도	3,725건	4,552건
10	네덜란드	4,256건	4,310건

- (기업별 출원 현황) '24년 PCT 출원 건수를 기준으로 화웨이(6,600건)가 1위를 기록하였으며, 삼성전자(4,640건)가 2위를 차지
 - 이어 퀄컴(3,848건), LG전자(2,083건), CATL(1,993건) 순으로 출원 건수가 많았음

〈2024년 PCT 출원 상위 10대 기업〉

순위	기업명	국가	PCT 출원 건수
1	화웨이(華為)	중국	6,600
2	삼성전자	한국	4,640
3	퀄컴(Qualcomm)	미국	3,848
4	LG전자	한국	2,083
5	CATL(닝더스다이, 寧德時代)	중국	1,993
6	BOE Technology Group (京東方)	중국	1,959
7	미쓰비시 전기	일본	1,956
8	샤오미(小米)	중국	1,889
9	에릭슨 (Ericsson)	스웨덴	1,886
10	니폰(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일본	1,877

- (대학별 PCT 출원 현황) 교육기관 출원에서는 캘리포니아대학교(519건)가 최다 출원 기관으로 자리하였으며, 중국 칭화대학교(188건), 저장대학교(175건)도 높은 순위를 기록

〈2024년 PCT 출원 상위 5대 대학〉

순위	대학명	국가	PCT 출원 건수
1	캘리포니아대학교	미국	519건
2	텍사스대학교	미국	216건
3	칭화대학교	중국	188건
4	저장대학교	중국	175건
5	서울대학교	한국	170건

- (기술 분야별 PCT 출원) 디지털 통신 분야가 전체 출원의 10.5%를 차지하며 최다 출원 기술 분야로 부상하였으며, 이는 '19년 이후 최상위를 유지했던 컴퓨터 기술 분야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참고자료

- ☑ (25.3.19, 人民政府) 世界知识产权组织公布2024年统计数据 中国是国际专利申请最大来源国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503/content_7014393.htm
- ☑ (25.3.17, globallegalpost) WIPO reports return to growth in patents and trademarks filings in 2024
<https://www.globallegalpost.com/>
- ☑ (25.3.18, natlawreview) China Remains Top Source of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Applications in 2024
<https://natlawreview.com/>

04 中 AI 기술 발전과 규제 병행, 생성형 콘텐츠 식별 의무화 추진

정리(miouly@naver.com)

■ 공업신식화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등 4개 부처는 AI 생성 콘텐츠 식별을 의무화하는 ‘인공지능 생성 합성 콘텐츠 식별 방안’을 발표했으며, ‘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25.3.14)

- (목적) AI 기술 발전으로 허위 정보 확산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AI 생성 콘텐츠 식별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

〈‘인공지능 생성 합성 콘텐츠 표시 방안’ 제정 배경〉

▶ (국제적 배경)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우려 확대

- 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가짜 정보 및 딥페이크(Deepfake) 확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유럽·미국 등 주요국은 AI 생성 콘텐츠 식별 표시 의무화를 도입하고, 디지털 워터마크 등 기술을 활용해 정보의 투명성 확보 및 사기 방지를 추진 중임

▶ (국내적 배경) AI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 증가 및 허위 정보 확산 우려

- 중국 내 AI 기반 콘텐츠 제작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으나, 허위 정보·딥페이크 콘텐츠 유포, 개인정보 침해 등 부작용이 발생함. 또한 유명한 합성 영상 등 딥페이크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기업·공공기관도 가짜 정보 확산으로 신뢰도 저하 문제에 직면함

*출처: (25.3.14, UNN) China introduces AI content labeling, like the EU and the USA

- (주요 내용) 이번 방안은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명시적(Explicit)·암시적(Implicit) 식별 표시 의무화, 콘텐츠 유통 과정의 검증·추적 강화 등 내용을 포함

〈‘인공지능 생성 합성 콘텐츠 표시 방안’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적용 대상	• 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합성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가상 환경 콘텐츠 및 이를 유통하는 서비스 제공자
식별 표시 유형	• 명시적 표시(Explicit): AI 생성 콘텐츠에 텍스트, 음성, 그래픽 등으로 명확한 표시 추가 • 암시적 표시(Implicit): 메타데이터, 디지털 워터마크 등을 활용한 기술적 식별
명시적 표시 기준	• 텍스트: 문서 앞·뒤·중간에 ‘AI 생성’ 등의 표시 • 음성: 시작·중간·끝에 음성 신호 추가 • 이미지·영상: 화면 특정 위치에 표시 • 가상 환경: 인터페이스 내 표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온라인 플랫폼은 AI 생성 콘텐츠 식별 여부 확인 및 ‘의심 콘텐츠’ 경고 표시 • 이용자가 AI 콘텐츠를 밝히지 않아도, 플랫폼이 AI 생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시 경고 표시 • AI 콘텐츠 게시자는 직접 콘텐츠 식별 선언 의무
플랫폼 운영자 규정	• AI 콘텐츠 생성 기능이 포함된 애플리케이션은 등록 시 관련 정보 제출 • 앱스토어 및 콘텐츠 플랫폼은 AI 콘텐츠 식별 여부를 검증할 의무
사용자 책임 및 금지 행위	• AI 콘텐츠 게시자는 명확한 식별 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삭제·조작하는 행위 금지 • AI 콘텐츠 표시를 악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금지
법적 의무 및 제재	• AI 콘텐츠 제공자는 법률·규제 준수 및 국가표준 적용 의무 • 플랫폼·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 등록 및 보안 평가 시 관련 식별 정보 제공 필수 • 위반 시 사이버 보안·전파 관리·공안·방송 등 관련 기관이 법적 조치 시행

- (관련 규제) 중국은 딥페이크와 생성형 AI의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민법전(民法典)’, ‘형법(刑法)’, ‘규정(規定)’의 다층적 규제 프레임으로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데이터 생성 및 위조의 전체 과정을 규제
 <중국 생성형 AI 남용 관련 규제>

	구분	내용(예시)	실행 시간
법	민법전	• (초상권 보호)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정보기술을 이용해 위조하는 행위를 금지 (제1019조)	2021.01
	형법	• (온라인 명예훼손 금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타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해자는 공간기관에 협조 요청 가능 (제246조)	2021.03
부 처 규 정	‘네트워크 음성·영상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 (AI 생성 콘텐츠 명확한 표기 의무) 딥러닝, 가상현실 등 신기술을 활용해 생성된 음성·영상 정보는 반드시 명확히 표기해야 함 (제11조)	2020.01
	‘네트워크 정보 콘텐츠 생태 관리 규정’	• (불법 콘텐츠 제작 및 유포 금지) 네트워크 정보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 제작자 및 플랫폼은 딥러닝, 가상현실 등 신기술을 이용하여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됨 (제23조)	2020.03
	‘인터넷 정보 서비스 심층 합성 관리 규정’	• (심층 합성 콘텐츠 규제) 조직 및 개인은 심층 합성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정보를 제작·유포하거나 국가 안전 및 타인의 합법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됨 (제6조) • (AI 뉴스 콘텐츠 유통 제한) 심층 합성 서비스를 활용해 제작된 뉴스 정보를 재전송할 경우, 반드시 인터넷 뉴스 정보 출처 기관이 게시한 내용을 기준으로 재전송해야 함	2023.01
실 행 방 안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 방안’	• (AI 서비스 제공 및 사용 규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함 (제4조) ① 국가 정권 전복 선동, 사회주의 제도 파괴, 국가 통일 및 사회 안정을 해치는 행위 금지 ② 알고리즘 설계, 데이터 훈련 및 서비스 과정에서 민족, 신앙, 성별, 연령 등 차별 방지 ③ 지식재산권 및 상업윤리를 준수하고, 알고리즘 데이터·플랫폼 독점 및 불공정 경쟁 금지 ④ 타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개인정보 보호, 초상권·명예권 침해 금지 ⑤ AI 서비스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생성 콘텐츠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 • (AI 콘텐츠 표식 의무화) AI 생성 이미지, 동영상 등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 심층 합성 관리 규정’에 따라 명확한 표식을 추가해야 함 (제12조)	2023.08

*출처: (24.9.20, KOSTEC 이슈리포트) 중국, 딥페이크(Deepfake) 규제 강화

■ 시사점

- 중국은 Deepseek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번 방안과 같이 정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윤리 기준 확립 등 다양한 목표를 고려한 조치로, 향후에도 기술 혁신과 규제 정책을 병행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 ☑ (25.3.14, 中国网信网) 关于印发《人工智能生成合成内容标识办法》的通知
https://www.cac.gov.cn/2025-03/14/c_1743654684782215.htm
- ☑ (25.3.14, 中国网信网) 四部门联合发布《人工智能生成合成内容标识办法》
https://www.cac.gov.cn/2025-03/14/c_1743654685899683.htm

05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속 中 정부, 기업 보호 위한 법안 시행

정리(miouly@naver.com)

- 중국 국무원은 ‘대외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역할 명확화, 기업 및 개인의 책임 규정, 외국의 불공정 행위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총 18개 조항을 마련했으며, 동 규정은 ‘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25.3.19)

- (입법 배경) 중국 최초로 대외 지식재산권 분쟁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대응 및 지원 체계를 구체화함
- (제정 목적)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겪는 지식재산권 분쟁과 불공정한 대우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 거래에서 권리를 보호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됨

〈참고: 중국 기업의 대외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

- ▶ 중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겪는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소송 건수가 두드러짐. 또한, 전자기기 및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등 기술집약형 산업을 중심으로 분쟁 발생이 집중됨
- ‘23년 미국 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규 지식재산권 소송 건수는 1,173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으며, 이 중 특허 소송 447건(56.1% 증가), 상표권 소송 757건(5.4% 증가)을 차지. 특히, 미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중국 기업이 피고로 지정된 비율은 94.6%에 달하며, 약 17,783개 기업이 소송에 연루됨
- 유럽연합(EU)의 ‘외국 보조금 규제(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시행으로 중국 기업이 약 76억 위안(약 1조 5,332억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간접적인 영향으로 80억 위안(약 1조 6,139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음

*출처: (24.10.9, 中国知识产权研究会) ‘2024中国企业海外知识产权纠纷调查’, http://m.iprdaily.cn/news_37764.html

- (핵심 내용) 본 규정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업과 기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외국의 불공정한 조치에 대한 반제 대응 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

〈대외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총칙 (제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및 보호 강화를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함
정부 역할 및 책임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원 및 관련 부처가 대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지도·지원함 • 지방정부는 지역별 상황에 맞춰 대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을 추진함 • 해외 지식재산권 법률 정보를 수집·공개하여 기업의 접근성을 높임 • 해외 법률 변화 및 사례를 분석하여 기업에 리스크 정보를 제공함 • 정부는 분쟁 대응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에 법적 대응을 지원함
대외 지재권 분쟁 해결 지원 (제7~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중재를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장려함 • 법률·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 • 기업의 법적 대응 비용 절감을 위해 기금 설립과 보험 가입을 장려함 • 산업협회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을 강화하도록 유도함

분야	주요 내용
기업 및 개인 책임 (제11~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은 해외 법률을 숙지하고 내부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함 해외 소송 관련 증거 수집 및 법적 문서 송달 관련 국제 조약과 국내 법률을 준수해야 함 해외 소송·조사 시 국가 기밀 및 데이터 보호 규정을 따라야 함
외국의 불공정 행위 대응 (제14~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원 상무부는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대응함 외국이 지식재산권 분쟁을 빌미로 중국을 견제·제한할 경우, 국무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중국 내 조직·개인은 외국의 차별적 지식재산권 제재를 이행할 수 없음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분쟁을 이용한 주권·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안보법 및 반독점법 등에 따라 대응 조치를 시행함 본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됨

■ 시사점

- 기존에는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지만, 이번 ‘대외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 도입으로 정부 차원의 정보 제공, 법률 지원, 기업 보호 및 반제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업의 법적 대응 부담이 줄어들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 ☞ (25.3.13, 人民政府网)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第801号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503/content_7014486.htm
- ☞ (25.3.20, 中国高新网) 李强签署国务院令 公布《国务院关于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的规定》
http://www.chinahightech.com/yaowen/2025-03/20/content_311923.html
- ☞ (24.7.29, 司法局) 关于《国务院关于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的规定（公开征求意见稿）》的说明
<https://zqyj.chinalaw.gov.cn/h5/draftExplain?DraftID=5490>

참 고

〈주간동향 기사 분류 체계〉		
중국 14.5 계획 (중국 국무원, '21.3월)	중국 6대 미래 산업 (중국 공신부 등 7개 부처, '24.1월)	한국 12대 전략기술 (한국 과기정통부, '23.12월)
1. 차세대 인공지능 2. 직접회로 3. 양자정보 4. 뇌과학 및 뇌모방 연구 5. DNA 및 바이오 기술 6. 임상 의학 및 건강 7. 심공, 심지 및 극지	1. 미래제조	스마트 제조, 바이오 제조, 나노 제조, 레이저 제조, 순환 제조, 공유 제조, 스마트 제어/센싱, 산업 인터넷, 메타버스 등
	2. 미래정보	차세대 이동통신, 위성 인터넷 양자정보, 양자/광자 컴퓨팅 대규모 언어 모델 등
	3. 미래재료	비철금속, 화학공업, 비금속 무기재료, 고성능 탄소섬유, 첨단 반도체, 초전도 소재 등
	4. 미래에너지	원자력, 핵융합, 수소에너지, 바이오매스, 미래 에너지 장비, 태양전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등
	5. 미래공간	유인 우주비행, 달탐사, 위성항법, 도심항공교통 심해작업 설비, 극지자원 탐사, 도시 지하공간 개발 등
	6. 미래건강	세포 유전자기술, 합성생물학, 바이오육종, 5G/6G, 메타버스, AI 활용 의료서비스, 디지털 트윈,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등
		1. 인공지능 2. 첨단 로봇/제조 3. 차세대 통신 4. 반도체/디스플레이 5. 사이버 보안 6. 양자 7. 첨단 모빌리티 8. 수소 9. 이차전지 10. 차세대 원자력 11. 우주항공/해양 12. 첨단 바이오



CHINA
SCIENCE

KOREA-CHINA SCIENCE &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중국 과학기술정책 동향

| 발 행 일 | 2025. 03. 21.

| 발행기관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 발 행 처 | 주소 : 북경시 조양구 주선교로 갑12호
전자성과기빌딩 1308호(100015)
TEL : 86)10-6410-7876/7886
<http://www.kostec.re.kr>

